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전 병 목** · 이 철 인***

논문 초록 본 논문은 노동소득과 저축,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소득간의 과세형평성을 분석한다. 최근의 최적과세 이론은 자본소득에 대한 양(+)의 단일세율 과세를 지지한다. 과세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거시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고려도 제시한다. 한국의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수준은 대체적으로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수준보다 높다. 자산소득간 과세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상당히 높은 반면 장기투자자산인 주택에 대한 세부담은 매우 낮다. 가구 자산구성을 감안한 자산과세의 재분배효과는 소득구성 효과 등으로 인해 미미하게 나타났다. 자산소득 유형에 따른 지나친 과세격차 축소와 함께, 노동소득 과세와의 관계를 감안한 과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핵심 주제어: 자산소득 과세, 노동소득 과세, 과세형평성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H24

투고 일자: 2020. 12. 17. 심사 및 수정 일자: 2020. 12. 29. 게재 확정 일자: 2021. 1. 11.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2019)를 요약·발췌한 것임. 본 논문은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편집위원회에서 주최한 “성장잠재력 제고와 분배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 심포지엄(2020 년 11월 20일) 발표원고를 심사자의 논평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e-mail: byungji@kipf.re.kr

*** 제2저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mail: leeci@snu.ac.kr

I. 배경

자산 관련 소득¹⁾에 대한 과세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점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과세 분야로 전통적인 연구 대상이다. 과세 형평성 관점에서는 소득원천에 관계없이 노동, 자산소득 등을 종합하여 누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 형태에 관계없이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조세부과는 개인의 소득획득 활동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효율성 관점에서는 소득세 부과로 인한 경제적 행태 왜곡이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주체의 행태 왜곡정도가 조세의 초과비용(Excess burden)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효율성 관점에서는 행태변화가 큰(작은) 세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높은) 세율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자산소득, 즉 다양한 자산형태를 통해 획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바탕으로 노동소득과 자산소득간 그리고 자산소득 유형간 과세 형평성을 분석한다. 문제인 정부 출범과 함께 조세정책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세부담 형평성 제고와 재분배기능 강화가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산소득 과세에 대한 선행 이론연구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이러한 이론 연구들의 결과가 현실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노동 및 자산 유형별 소득세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동 및 개별 자산에 대한 소득과세제도가 생활단위인 가계단계에서 소득구성 변화에 따라 어떻게 종합적인 재분배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한다. 즉 노동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이론적 관점과 개별 투자대안의 관점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계의 자산구성에 따른 종합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II. 선행연구

최근의 이론적 분석결과는 자본과세를 지지하고 있다. 전통적 최적자산과세의 결과는 자본의 축적을 통해 개인의 후생을 가장 빨리 제고할 수 있음에 기초하여 자본과세에 부정적이었다. 즉, 자본축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노동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1) 자산소득과 자본소득은 본 연구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자산소득은 소득의 원천인 자본의 다양한 형태, 즉 자산 형태에 중점을 둔 표현으로 이해되는 반면 자본소득은 노동소득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다양한 자산에 대한 포괄적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산소득 간 과세 형평성도 함께 분석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자산소득이라는 표현을 주로 이용한다.

상승할 수 있어서 소득 및 소비 수준 제고로 이어지고 개인과 사회 후생의 극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Chamley, 1986; Chari and Kehoe, 1994; Jones et al., 1997; Judd, 1999 등). 그러나 최근 동태적 최적자산과세이론에서는 양(+)의 자본과세를 지지하는 결과를 도출한다(Golosov and Tsyvinski, 2007; Kopczuk, 2013 등). 그 이유는 누진세제만을 통해서 재분배를 하는 데 따른 효율비용이 과도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누진적 소득세의 부과로 노동공급의 왜곡이 고능력자를 중심으로 크게 나타난다. 특히 다기간을 상정해보면 초기에 급속히 자본축적을 한 후 근로를 줄이고 자본소득만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고능력자들의 노동공급을 늘리기 위해 누진성을 다소 줄여서 노동공급 인센티브를 키우고, 그 대신 부족한 세수를 자본과세를 통해 얻으면서 자본축적 유인을 이전보다 다소 줄이는 구조로 가자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기간 간 개인의 소득능력정보를 사실 그대로 드러내도록 유도하기 위해 미래보다는 현재 소비에 가중치를 두도록 유인 구조를 바꾸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근로를 좀 더 이끌어내고 저축 및 자본축적을 다소 줄이도록 하는 것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최적자산선택이론을 최적자산과세의 맥락에서 해석해보면 금융상품 간 조세 중립성도 통상적 가정에서 얻어진다(Atkinson-Stiglitz, 1976). 각종 위험 자산들 간 수익률, 위험도를 반영하는 분산 등이 매우 상이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자산들이 노동공급과 특수한 관계를 지니지 않는다면(즉, 노동공급과 중립적(uncorrelated)이라면) 모든 위험 자산들에 일정한 비율로 과세하는 것이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자산 간 수익률이 조세에 의해 차등화되면 자산 간 불필요한 이동이 발생하는데, 이는 비효율성의 원인이 된다.²⁾ 따라서 통상적 금융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할 만한 일정한 과세 수준을 형성해주는 것이 정책적으로 도움이 된다. 자산과세의 누진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지 않다. 다만 Graham and Smith(1999)에 따르면 자산과세의 누진성은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제주체의 시점간 소득이동(Carry-forward 또는 Carry-backward) 헤지행위를 과도하게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산소득에 대한 최적과세 관점에서의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조세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먼저 개방경제에서 나타나는 다차원의 제약에 대해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기존의 자본소득 과세에 대한 효율성, 형평성 관점뿐만 아니라 자본

2) 개별 위험이 거시적 위험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수법칙에 의해 경기변동을 완화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제상 우대해 줄 수 있다(Acemoglu et al., 2012).

이동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거시경제적 안정성도 중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외국과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자본의 해외유출입 등 거시경제의 취약성도 자산소득 관련 과세정책에서 고려해야 한다. 유사한 상황에서 위기를 경험한 북유럽국가의 이원적 소득과세 사례를 정책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론적 결과와 같이 자본소득에 대해 과세하되, 노동소득의 낮은 세율수준으로 과세하여 거시경제적 안정성도 추구하는 사례이다.

또한 각종 자산 관련 소득에 대해 세율 격차를 줄여나가며 일종의 단일세율에 근접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기준으로 자산소득세율을 접근시키는 것이 자산구조의 왜곡을 줄이며, 청년기 노동소득을 기반으로 자산형성을 유도하기에도 유리하다. 자산소득을 통한 지나친 소득격차 확대를 방지하려면 제한된 범위에서 누진적 과세구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기존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부동산세는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그 적용범위의 설정을 통해 기존 이론과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Ⅲ. 노동소득과 자산소득 과세형평성 분석

1. 국제비교

각 국가별 자산소득의 과세방법은 노동소득과의 관계에 따라 종합과세(classical), 분리과세 등으로 구분하며, 각 소득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가장 대표적인 자산소득 유형인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경우 과세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배당소득의 경우, 많은 나라에서 노동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되, 법인단계 세부담에 대한 조정여부에서 차이를 보인다. 법인단계 세부담, 즉 법인세부담을 개인단계에서 조정하기 위하여 임퓨테이션(Imputation),³⁾ 부분과세⁴⁾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기존의 노동소득 과세와 구분하여 완납적 원천징수제도⁵⁾를 적용하기도 한다. 반면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노동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기도 하지만 많은 국가가 원천징수로 과세의무를 종결하는 완납적 원천징수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자산소득에 대한 세부담수준 및 형평성 분석은 소득수준별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3) 법인세 부담을 주주단계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방법.

4) 배당소득의 일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함으로써 법인세부담을 주주단계 소득세에서 반영.

5)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

개별국가 자료수집의 한계를 반영하여 최고세율 해당자에 대해 비교분석한다. 자본 이동의 유인과 능력 등을 감안할 때 고소득층에 대한 분석이 더 큰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배당소득에 대한 최고 세부담 수준은 2016년 기준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51%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33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6개국(미국, 스위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프랑스, 캐나다)뿐이다. 더구나 2017년, 2018년에 걸쳐 소득세 최고세율이 40%, 42% (2016년 38%)로, 2019년부터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 (2016년 22%)로 인상된 점을 반영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56.7%⁶⁾까지 상승하여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다.⁷⁾ 이는 자본소유자들이 법인 주주로서 투자할 유인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음을 보여준다.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장기적 성장동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일반적으로 이자에 대한 세부담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배당소득은 법인단계에서 부담하는 법인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인단계에서만 소득세가 부과되는 이자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유일한 예외는 남아프리카공화국(ZAF)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배당소득세 부담은 완납적 원천징수(15%)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총부담은 법인단계 부담을 포함하여 38.8%이다. 그러나 이자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소득세 최고세율인 41%가 적용되어 배당소득 적용세율보다 높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 격차가 커지는 것은 조세의 중립성 관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격차는 자본공급자의 투자경로 선택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법인과세 측면에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채 유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도 있다. 대표적으로 벨기에, 이탈리아, 터키는 자기자본에 대한 비용공제(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 ACE)를 허용함으로써 타인자본과의 조세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자기자본에 대한 비용공제를 일괄적으로 시행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세입 감소 문제 등을 감안하여 신규자본, 즉 신주 취득 시에만 동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유형의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이탈리아와 터키로 이자소득과의 세율 격차도 거의 사라지게 된다.

6) 배당소득세부담 = 법인세율 + (1 - 법인세율) × (1 + gross-up 비율) × 소득세 최고세율 - (1 - 법인세율) × gross-up 비율.

7) 2021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은 45% (지방세 포함시 49.5%)로 인상예정이므로 이를 적용시 최고세율 적용자의 경우 세부담은 59.4%까지 증가.

〈표 1〉 최고소득자에 대한 배당소득세와 이자소득세 법정세율(2016년 기준)

(단위: %)

국가명	배당소득세				(예금)이자소득세			
	방식	CIT	PIT	합계	방식	FW	PIT	적용
호주(AUS)	IM	30.0	49.0	49.0	FI	-	49.0	49.0
오스트리아(AUT)	FW	25.0	(27.5)	45.6	FW	25.0	-	25.0
벨기에(BEL)	ACE(FW)	34.0	(27.0)	44.8	FW	27.0	-	27.0
캐나다(CAN)	IM*	26.8	53.5	55.6	FI	-	53.5	53.5
칠레(CHL)	IM	24.0	40.0	40.0	PI^	-	40.0	40.0
코스타리카(CRI)	FW	30.0	(5.0)	33.5	NT	-	-	-
체코(CZE)	FW	19.0	(15.0)	31.2	FW	15.0	-	15.0
에스토니아(EST)	DD	20.0	-	20.0	NT	-	-	-
핀란드(FIN)	PI	20.0	34.0	43.1	FW	30.0	-	30.0
프랑스(FRA)	PI	34.4	45.0	53.2	CL	(39.5)	45.0	45.0
그리스(GRC)	FW	29.0	(10.0)	36.1	FW	15.0	-	15.0
헝가리(HUN)	FW	19.0	(15.0)	31.2	FW	15.0	-	15.0
아이슬란드(ISL)	CL	20.0	20.0	36.0	FI	(20.0)	-	20.0
아일랜드(IRL)	CL	12.5	51.0	57.1	FW	41.0	-	41.0
이스라엘(ISR)	CL	25.0	27.0	45.3	CL	-	27.0	27.0
이탈리아(ITA)	FW	31.3	(26.0)	49.2	FW	26.0	-	26.0
이탈리아신주(ITAnew)	ACE(FW)	31.3	(26.0)	26.0	-	-	-	-
룩셈부르크(LUX)	PI	29.2	40.0	43.4	FW	10.0	-	10.0
멕시코(MEX)	FW	30.0	(10.0)	37.0	PI^	(0.5)	35.0	35.0
네덜란드(NLD)	PR	25.0	30.0	55.0	PR	-	30.0	30.0
뉴질랜드(NZL)	IM	28.0	33.0	33.0	FI	(33.0)	33.0	33.0
노르웨이(NOR)	RRA	25.0	28.8	42.3	FI	-	25.0	25.0
폴란드(POL)	FW	19.0	(19.0)	34.4	FW	19.0	-	19.0
포르투갈(PRT)	FW	29.5	(28.0)	49.2	FW	28.0	-	28.0
싱가포르(SGP)	NT	17.0	-	17.0	NT	-	-	-
슬로바키아(SVK)	CL^	22.0	14.0	32.9	FW	19.0	-	19.0
슬로베니아(SVN)	FW	17.0	(25.0)	37.8	CL	-	25.0	25.0
남아프리카공화국(ZAF)	FW	28.0	(15.0)	38.8	FI	-	41.0	41.0
스페인(ESP)	CL	25.0	23.0	42.3	FI	(19.0)	23.0	23.0
스웨덴(SWE)	CL	22.0	30.0	45.4	CL	-	30.0	30.0
스위스(CHE)	CL	21.1	41.3	53.7	FI	(19.0)	41.3	41.3
터키(TUR)	PI	20.0	35.0	34.0	FW	15.0	-	15.0
터키신주(TURnew)	ACE(PI)	20.0	35.0	17.5	-	-	-	-
영국(GBR)	CL	20.0	38.1	50.5	FI	(20.0)	45.0	45.0
미국(USA)	CL^	38.9	28.5	56.3	FI	-	47.3	47.3
한국(KOR)	IM^	24.2	41.8	51.0	FI	(15.4)	-	41.8

주: 배당소득세 중 괄호 안은 완납적 원천징수(Final withholding tax) 세율, 이자소득세 중 괄호 안은 예납적 원천징수(Preliminary withholding tax) 세율.

ACE(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 CL(Classical), CL^ (Modified classical), DD(Tax on distributed dividends), FI(Full inclusion), FW(Final withholding), IM(Full imputation), IM*(Imputation with gross-up factor), IM^ (Partial imputation), NT(No taxation), PI(Partial inclusion), PI^ (Partial inclusion with inflation adjustment), PR(Presumptive return), RRA(Rate of return allowance).

자료: Harding and Marten(2018)을 재편집 및 한국은 저자 추가.

주식에 대한 투자수익은 양도차익 형태로도 얻을 수 있다. 기업이익을 100% 배당하지 않고 일부를 사내에 유보하면, 이는 주식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주식 양도차익과세에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를 차별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나눌 수 있다. 장기보유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이유는 소득 형성기간, 인플레이션 효과 등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장기보유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주주단계에서의 비과세, 낮은 세율 적용 등이다. 벨기에, 코스타리카,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등은 주주단계에서 장기보유 주식의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다. 칠레, 체코, 헝가리,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터키 등은 일정 보유기간 검증 후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보유기간 검증 후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호주, 핀란드, 프랑스, 미국 등이 있다. 즉 많은 국가에서는 보유기간을 조건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수준을 낮게 설정하고 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어주는 장기보유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1년이다. 호주, 칠레, 터키, 미국 등이 채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요구하는 국가는 슬로베니아(20년), 핀란드(10년), 프랑스(8년), 헝가리(5년) 등이다. 가장 짧은 국가는 룩셈부르크로서 0.5년이다. 우리나라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대주주 여부 및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세하고 있다. 양도차익은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하는데, 대주주에게만 과세하고 있다⁸⁾. 대주주도 중소기업 이외 주식을 1년 미만 단기보유하면 높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1년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장기와 단기를 구분한다.

장기보유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종합적 세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40.9%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중간 정도이다.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미국 등 전통적인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의 세부담을 보인다. 반면 벨기에, 뉴질랜드, 스위스, 동유럽 국가 등은 우리보다 낮은 세율로 부과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주주에 적용하는 세율을 2018년부터 25%로 인상하여 장기보유 시 종합적 세부담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과 함께 작용하여 47.4%까지 높아졌다.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등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다. 그러나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어 누진성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율구조는 분산투자자

8) 2020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면적으로 과세할 계획.

(표 2)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2016년 최고세율기준)

(단위: %)

국가명	장기보유				단기보유			
	방식	CIT	PIT	합계	방식	CIT	PIT	합계
호주(AUS)	PI*	30.0	49.0	47.2	CL	30.0	49.0	64.3
오스트리아(AUT)	FW	25.0	(27.5)	45.6	-	-	-	-
벨기에(BEL)	ACE(NT)	34.0	-	24.4	ACE(FW)	34.0	(33.0)	49.3
캐나다(CAN)	PI	26.8	53.5	46.4	-	-	-	-
칠레(CHL)	NT*	24.0	-	24.0	IM	24.0	16.0	40.0
코스타리카(CRI)	NT	30.0	-	30.0	-	-	-	-
체코(CZE)	NT*	19.0	-	19.0	CL	19.0	15.0	31.2
에스토니아(EST)	CL	20.0	20.0	36.0	-	-	-	-
핀란드(FIN)	FI*	20.0	34.0	47.2	-	-	-	-
프랑스(FRA)	FI*	34.4	32.8	55.9	CL	34.4	62.0	75.1
그리스(GRC)	ST	29.0	15.2	39.8	-	-	-	-
헝가리(HUN)	NT*	19.0	-	19.0	ST	19.0	15.0	31.2
아이슬란드(ISL)	ST	20.0	20.0	36.0	-	-	-	-
아일랜드(IRL)	ST	12.5	33.0	41.4	-	-	-	-
이스라엘(ISR)	ST(PI^)	25.0	27.0	45.3	-	-	-	-
이탈리아(ITA)	ST	31.3	26.0	49.2	-	-	-	-
신주(ITAnew)	ACE(ST)	31.3	26.0	26.0	-	-	-	-
룩셈부르크(LUX)	NT*	29.2	-	29.2	CL	29.2	44.1	60.4
멕시코(MEX)	ST(PI^)	30.0	10.0	37.0	-	-	-	-
네덜란드(NLD)	PR	25.0	30.0	55.0	-	-	-	-
뉴질랜드(NZL)	NT	28.0	-	28.0	-	-	-	-
노르웨이(NOR)	RRA	25.0	28.8	42.3	-	-	-	-
폴란드(POL)	ST	19.0	19.0	34.4	-	-	-	-
포르투갈(PRT)	FW	29.5	(28.0)	49.2	-	-	-	-
싱가포르(SGP)	NT	17.0	-	17.0	-	-	-	-
슬로바키아(SVK)	CL	22.0	(19.0)	36.8	-	-	-	-
슬로베니아(SVN)	NT*	17.0	-	17.0	ST	17.0	25.0	37.8
남아프리카공화국(ZAF)	PI	28.0	41.0	39.8	-	-	-	-
스페인(ESP)	ST	25.0	23.0	42.3	-	-	-	-
스웨덴(SWE)	CL	22.0	30.0	45.4	-	-	-	-
스위스(CHE)	NT	21.1	-	21.1	-	-	-	-
터키(TUR)	NT*	20.0	-	20.0	-	-	-	-
신주(TURnew)	ACE(NT*)	20.0	-	0.0	-	-	-	-
영국(GBR)	ST	20.0	20.0	36.0	-	-	-	-
미국(USA)	ST*	38.9	28.3	56.2	ST*	38.9	47.1	67.7
한국(KOR)	ST*(NT)	24.2	22.0	40.9	ST*	24.2	33	49.2

주: 괄호 안은 완납적 원천징수(Final withholding tax, FW) 세율이며, *는 일정 보유기간 이후 적용.

ACE(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 CL(Classical), FI(Full inclusion), FW(Final withholding), NT(No taxation), NT*(No taxation after holding period), PI(Partial inclusion), PI^(Partial inclusion with inflation adjustment), RRA(Rate of return allowance), ST(Separate taxation), ST*(Separate taxation after holding period).

자료: Harding and Marten(2018)의 내용을 재편집 및 한국은 저자 추가.

〈표 3〉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2016년 최고세율기준)

(단위: 년, %)

국가명	방식	장기보유기준	과세소득비율	PIT	합계
호주(AUS)	PI*	1	50.0	49.0	24.5
오스트리아(AUT)	FW	-	100.0	30.0	30.0
벨기에(BEL)	NT*	5	-	-	-
캐나다(CAN)	PI		50.0	53.5	26.8
칠레(CHL)	PI^	1	100.0	40.0	40.0
코스타리카(CRI)	NT	-	-	-	-
체코(CZE)	NT*	5	-	-	-
에스토니아(EST)	FI	-	100.0	20.0	20.0
핀란드(FIN)	FI*	10	100.0	34.0	34.0
프랑스(FRA)	NT*	30	100.0	-	-
그리스(GRC)	ST(PI^)	26	100.0	15.0	15.0
헝가리(HUN)	NT*	15	-	-	-
아이슬란드(ISL)	ST	-	100.0	20.0	20.0
아일랜드(IRL)	ST	-	100.0	33.0	33.0
이스라엘(ISR)	ST(PI^)	-	100.0	27.0	27.0
이탈리아(ITA)	NT*	5	100.0	-	-
룩셈부르크(LUX)	FI*	2	100.0	20.0	20.0
멕시코(MEX)	PI^	-	100.0	35.0	35.0
네덜란드(NLD)	PR	-	100.0	30.0	30.0
뉴질랜드(NZL)	NT*	2	-	-	-
노르웨이(NOR)	FI	-	100.0	25.0	25.0
폴란드(POL)	NT*	5	-	-	-
포르투갈(PRT)	PI^	-	50.0	56.5	28.3
싱가포르(SGP)	NT	-	-	-	-
슬로바키아(SVK)	NT*	5	100.0	-	-
슬로베니아(SVN)	NT*	20	-	-	-
남아프리카공화국(ZAF)	PI	-	40.0	41.0	16.4
스페인(ESP)	ST	-	100.0	23.0	23.0
스웨덴(SWE)	PI	-	90.0	30.0	27.0
스위스(CHE)	NT	-	-	-	-
터키(TUR)	NT*	5	100.0	-	-
영국(GBR)	ST	5	100.0	28.0	28.0
미국(USA)	ST*	*	*	*	*
한국(KOR)	ST(NT)	2	-	41.8	41.8

주: 괄호 안은 완납적 원천징수(Final withholding tax, FW) 세율이며, *는 일정 보유기간 이후 적용.
 FI(Full inclusion), FW(Final withholding), IM(Full imputation), NT(No taxation), NT*(No taxation after holding period), PI(Partial inclusion), PI^(Partial inclusion with inflation adjustment), PR(Presumptive return), ST(Separate taxation), ST*(Separate taxation after holding period).

자료: Harding and Marten(2018)을 재편집 및 한국은 저자 추가.

또는 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작은 계층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지만, 고자본 투자자의 자산배분을 왜곡할 수 있다.

중요한 저축 자산의 하나인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각 국가들은 차별화된 과세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주식 양도차익과 유사하게 장기보유 양도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당수 국가들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다. 싱가포르, 스위스, 코스타리카 등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며 벨기에, 체코,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뉴질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 등은 장기보유할 경우 비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⁹⁾ 하고 있다. 과세하는 경우에도 전반적인 세부담 수준은 주식 양도소득에 비해 낮다. 이는 주식의 경우 법인단계에서 부과되는 법인세 부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4〉 장기보유 자산의 양도소득세율 비교(2016년)

(단위: %, %p, 년)

	장기보유 주식 양도소득		장기보유 부동산 양도소득		세율격차 (A-B)
	최고세율(A)	보유기간	최고세율(B)	보유기간	
호주(AUS)	47.2	1	24.5	1	22.7
벨기에(BEL)	24.4	-	0.0	5	24.4
칠레(CHL)	24.0	1	40.0	1	-16.0
체코(CZE)	19.0	3	0.0	5	19.0
핀란드(FIN)	47.2	10	34.0	10	13.2
프랑스(FRA)	55.9	8	0.0	30	55.9
그리스(GRC)	39.8	-	15.0	26	24.8
헝가리(HUN)	19.0	5	0.0	15	19.0
이탈리아(ITA)	49.2	-	0.0	5	49.2
룩셈부르크(LUX)	29.2	0.5	20.0	2	9.2
뉴질랜드(NZL)	28.0	-	0.0	2	28.0
폴란드(POL)	34.4	-	0.0	5	34.4
슬로바키아(SVK)	36.8	-	0.0	5	36.8
슬로베니아(SVN)	17.0	20	0.0	20	17.0
터키(TUR)	20.0	-	0.0	5	20.0
영국(GBR)	36.0	-	28.0	5	8.0
미국(USA)	56.2	1	-	-	-
한국(KOR)	40.9	1	41.8(0.0)	2	-0.9(40.9)

주: 보유기간이 없는 것은 장단기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이며, 괄호 안은 거주 주택(1세대 1주택, 9억원 이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자료: Harding and Marten(2018)을 재편집 및 한국은 저자 추가.

9) 거래가격 9억원 이하 부분에 적용.

〈표 5〉 투자자산별 소득세 최고세율 수준(2016년 기준)

(단위: %)

국가	노동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주식)	이자소득 (채권)	이자소득 (예금)	양도소득 (부동산)
호주(AUS)	49.0	49.0	47.2	49.0	49.0	24.5
오스트리아(AUT)	55.0	45.6	45.6	27.5	25.0	30.0
벨기에(BEL)	53.3	44.8	24.4	27.0	27.0	0.0
캐나다(CAN)	53.5	55.6	46.4	53.5	53.5	26.8
칠레(CHL)	40.0	40.0	24.0	40.0	40.0	40.0
코스타리카(CRI)	-	33.5	30.0	8.0	0.0	0.0
체코(CZE)	15.0	31.2	19.0	15.0	15.0	0.0
에스토니아(EST)	20.0	20.0	36.0	20.0	20.0	0.0
핀란드(FIN)	34.0	43.1	47.2	30.0	30.0	34.0
프랑스(FRA)	45.0	53.2	55.9	45.0	45.0	0.0
그리스(GRC)	55.0	36.1	39.8	15.0	15.0	15.0
헝가리(HUN)	15.0	31.2	19.0	15.0	15.0	0.0
아이슬란드(ISL)	31.8	36.0	36.0	20.0	20.0	20.0
아일랜드(IRL)	51.0	57.1	41.4	51.0	41.0	33.0
이스라엘(ISR)	27.0	45.3	45.3	27.0	27.0	27.0
이탈리아(ITA)	46.3	49.2	49.2	26.0	26.0	0.0
이탈리아 신주	46.3	26.0	26.0	26.0	26.0	0.0
룩셈부르크(LUX)	40.0	43.4	29.2	10.0	10.0	20.0
멕시코(MEX)	35.0	37.0	37.0	35.0	35.0	35.0
네덜란드(NLD)	52.0	55.0	55.0	30.0	30.0	30.0
뉴질랜드(NZL)	33.0	33.0	28.0	33.0	33.0	0.0
노르웨이(NOR)	38.7	42.3	42.3	25.0	25.0	25.0
폴란드(POL)	32.0	34.4	34.4	19.0	19.0	0.0
포르투갈(PRT)	48.0	49.2	49.2	28.0	28.0	28.3
싱가포르(SGP)	-	17.0	17.0	0.0	0.0	0.0
슬로바키아(SVK)	25.0	32.9	36.8	19.0	19.0	0.0
슬로베니아(SVN)	50.0	37.8	17.0	25.0	25.0	0.0
남아프리카공화국(ZAF)	-	38.8	39.8	41.0	41.0	16.4
스페인(ESP)	45.0	42.3	42.3	23.0	23.0	23.0
스웨덴(SWE)	57.1	45.4	45.4	30.0	30.0	27.0
스위스(CHE)	41.3	53.7	21.1	41.3	41.3	0.0
터키(TUR)	35.0	34.0	20.0	10.0	15.0	0.0
터키 신주	35.0	17.5	0.0	10.0	15.0	0.0
영국(GBR)	45.0	50.5	36.0	45.0	45.0	28.0
미국(USA)	46.3	56.3	56.2	47.4	47.3	-*
한국(KOR)	41.8	51.0	40.9	41.8	41.8	41.8

주: 미국(*)은 다양한 조건하에서 달라져 일률적으로 표시할 수 없음.

자료: Harding and Marten(2018)을 재편집 및 한국은 저자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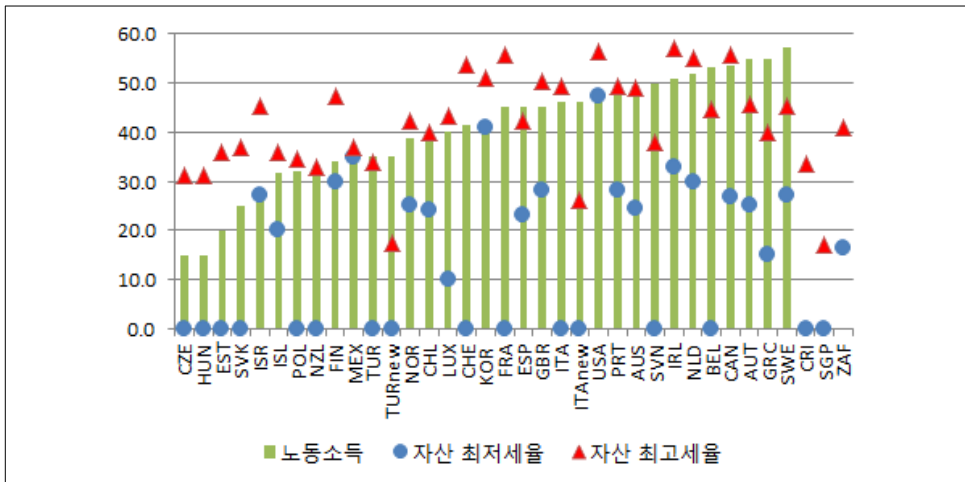
다양한 자산별 세부담 수준(최고세율 기준)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자산 간 세부담 격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게 나타났다. 조세의 중립성 관점에서 외국에 비해 나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체적으로 자산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자산유형에 따라 40.9%(주식 양도소득)~51.0%(배당소득)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배당소득에 대한 최고 적용세율 51.0%를 제외하면 40.9%(주식 양도소득), 41.8%(채권 및 예금 이자소득, 부동산 양도소득)로서 자산유형별 격차도 낮다. 자산별 세부담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은 자산선택에 대한 왜곡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절대적 세부담 수준은 노동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부담 41.8%와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수준으로, 자본의 이동성, 자본소득 과세의 이론적 타당성 등을 감안하면 다소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선행 이론연구가 절대적 세율수준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고소득자의 조기은퇴 방지 목적과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고려하면 이동성이 낮은 노동소득보다 높은 세율 부과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절 필요성이 있다.

2016년 기준으로 각 국가의 노동소득에 대한 최고세율과 자산유형별 최고세율간 차이 분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비교대상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수준을 보이며, 소득종류간 최고세율 격차는 크지 않게 나타난다. 노동소득 과세와 비교한 자산유형별 소득과세 수준은 노동소득과세 수준과 유사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자산소득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수준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그룹에 속한다. 즉 51.0% 수준에 달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세계적으로도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위스 등 다음으로 높다. 다양한 자산소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들중 낮은 최고세율 역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고소득자가 직면하는 투자옵션 중 최고세율이 가장 낮은 세율은 40.9%(주식 양도소득)로서 미국의 47.3%(예금 이자소득) 다음으로 높다. 다른 국가들은 주로 부동산 양도소득 등에서 비과세가 많아 낮은 자산소득 세율이 0%인 경우도 많고, 노동소득보다 상당히 낮은 최고세율의 투자옵션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소득과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의 자산소득 과세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 멕시코, 미국 등에 그친다.

반면 노동소득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자산소득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도 있다. 자본의 이동성을 감안한 효율성 관점을 반영한 국가이다. 스웨덴, 그리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과세방식은 복구국가에서 이원적 소득과세(Dual income taxation)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 양도관련 자산소득 최고세율이 노동소득 최고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림 1〉 노동소득과 자산유형별 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분포(2016년 기준)

(단위: %)



주: 자산 최저세율과 자산 최고세율은 자산유형별 소득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들 중 가장 낮은 수준과 가장 높은 수준을 의미.

자료: Harding and Marten (2018) 을 재편집 및 한국은 저자 추가 작성.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세부담 차이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을 보여준다. 형평성 관점에서는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헤이그-사이먼스(Haig-Simons)의 종합소득(Comprehensive income) 개념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소득개념하에서는 소득의 원천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가 소득획득 활동 선택에 왜곡을 주지 않는다. 이 경우 각 소득원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된다. 미국, 우리나라 등은 이러한 관점에서 조세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자본축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인 노동생산성 향상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 자산소득 관련 조세의 왜곡효과에 관심을 둔 이론들은 자산 또는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수준을 노동소득에 비해 낮게 운용할 것을 제시한다. 자산 또는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는 자본의 장소 이동을 촉진하거나, 소득의 시점 이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조세부과의 왜곡효과를 줄여 자본축적을 촉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생산성 향상과 사회후생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자산과세

우리나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분석은 대표적인 자산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양도소득, 주택양도소득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간소득을 바탕으로 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과 함께 기업의 배당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 주식 양도소득도 함께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자산유형별 소득수준에 따른 실효세율을 비교함으로써 자산유형별 소득과세의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장기 형성소득인 부동산(주택) 양도소득의 경우 유사한 성격의 저축인 연금저축에 대한 과세수준과 비교하고, 동시에 노동소득 과세수준과도 비교하였다. 이 경우 소득수준별 투자의 한계세율을 바탕으로 과세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1) 이자 및 배당소득

먼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법인단계 세부담의 일부를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조정하고 있다. 법인단계 세부담의 일부라 함은 법인단계 세율 중 낮은 세율, 즉 10%의 법인세액에 대해 소득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배당액의 11%¹⁰⁾를 gross-up한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액을 산출하고 gross-up 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형식이다. 이때 법인단계 세부담은 법인세 최고세율인 25%¹¹⁾를 가정하였다. 이자 및 배당소득과의 세부담 격차 비교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부담률도 함께 제시하였다. 근로소득세 부담률 산출은 1인 가구를 가정하고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표준공제 등을 적용하였다. 배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도 중요한 소득유형 결정요인이므로 사업소득에 대한 실효세율도 도출하였다. 사업소득에 대한 세부담 도출과정에서 소득과약률은 안중석(2019)¹²⁾에 따라 70.7%로 가정하였다.

10) 배당액의 11%는 배당이전 소득액의 10%이며 이는 법인세 세율체계에서 가장 낮은 세율수준이다.

11) 배당하는 기업의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표적 사례를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기업의 법인세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고세율로 가정하였다.

12)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과약률 추정을 위해 국세청의 소득신고자료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자료를 비교하였다. 신고 사업소득에는 종합소득신고서상의 사업소득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나타난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포함하고 이에 대비한 국민계정상 사업소득 항목에는 가계영업잉여, 재산소득, 준법인기업소득 인출, 임료 등으로 구성하여 그 비율을 도출한다. 이에 따른 사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 산출결과 예금(채권)과 주식 등의 자산에서 획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 수준은 근로소득세의 세부담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격차는 저소득구간에서 크게 나타난 반면 고소득구간에서는 좁혀졌다. 전반적으로 예금 및 주식 관련 소득¹³⁾에 대한 과세수준이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높은 세율수준은 저소득층, 청년층의 초기 자본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자소득의 경우 초기 분리과세 시점인 2,000만원까지의 세부담률은 근로소득 약 1억 1천만원 수준의 세부담률과 동일할 정도로 높은 세부담을 보인다. 가장 높은 세부담을 보이는 자산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부담률보다 월등히 높다. 다른 자산소득에 비해서도 높은 세부담률을 보이므로 보유자산으로서의 경제적 인센티브는 매우 약하다. 한편 배당소득에 대한 주주단계 세부담은 법인세 부담에 대한 배당세액공제의 영향으로 1억원 이상 소득구간에서는 근로소득보다 낮은 세부담을 보여준다. 법인단계의 세부담, 즉 암묵적 부담을 고려하지 못하는 근시안적 시각의 개인들에게 자산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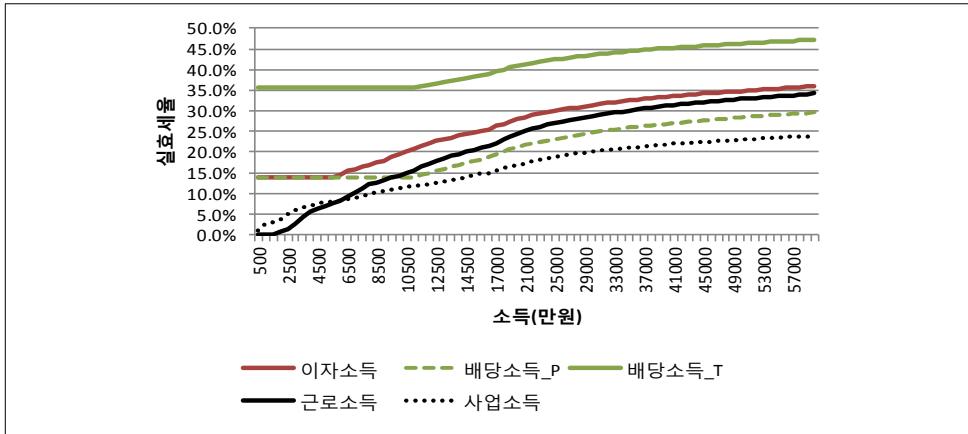
자산소득과의 과세수준 비교를 위해 도입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수준은 큰 격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득과악률의 차이를 반영한 공제제도 운영으로 인해 낮은 소득구간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근로소득보다 높고, 반대로 소득이 높아지면 사업소득의 세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이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과악률을 70.7% (2017년)로 가정함으로 인해,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의 과세소득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실효세율이 같아지는 소득수준은 약 6,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중상위 이상의 사업소득자들에 대한 세원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¹⁴⁾ 이러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과악률 차이는 우리나라 소득세제에서 일정 부분 감안되고 있다. 대표적인 방법은 공제제도의 차등으로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정직하게 신고하는 사업소득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문제를 내포하게 된다.

업소득 과악률은 70.7% (2017년)이다(안종석, 『소득세 수입 변동요인 분석 및 정책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13) 100% 배당을 가정.

14) 소득수준별 소득과악률이 차이가 날 때는 다른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다.

〈그림 2〉 이자 및 배당소득의 실효세율(2019년)



주: 배당소득_P는 주주단계에서 소득세 부담이며 배당소득_T는 법인 및 주주 단계 소득세 부담의 합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1인 기준이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과약을 70.7% 적용.
 자료: 저자 작성.

(2)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대표적 자산인 주식과 부동산(주택)에 대해 분석한다. 먼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와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이익을 배당하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유보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즉 기업의 배당정책에 따라 주식관련 소득의 세부담률이 달라지게 된다.

현재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으며 대주주의 기준은 주식의 보유액 또는 지분율로 정의되는데 2021년까지 기업별 3억원 이상으로 금액 기준이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¹⁵⁾ 주식보유로 인한 소득은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성됨을 감안하여 배당과 양도소득 비중이 각각 50%인 경우를 가정하였다. 양도를 위한 보유기간은 2년을 가정하였다.¹⁶⁾ 동시에 소액주주와 대주주인 경우를 구분하여 주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산출하였다.

주식자산 보유에 따른 세부담 수준은 소득획득 유형, 즉 배당 또는 양도 소득과 주주의 지위(대주주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기업이익의 50% 정도를 배당한다

15) 2020년 정부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모든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다.

16) 보유기간 2년에 따른 물가상승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고 가정하였을 때, 100% 배당시에 비해 세부담 수준은 낮아지게 된다. 이는 배당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으로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은 양도소득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체 실효세율은 하락한다. 그러나 근로소득에 대한 실효세율보다는 여전히 전 소득구간에서 높은 실효세율을 보여준다.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되기 때문에 배당비율이 낮아질수록 전체 세부담 수준은 대주주의 그것보다 보다 더 떨어지게 된다. 이 경우 높은 소득구간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실효세율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기업수익에 대한 배당 결정에서 대주주의 영향이 크고, 배당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고려할 때 세부담을 고려한 배당축소는 쉽지 않다.¹⁷⁾ 전반적으로 주식 관련 소득의 실효세율은 근로소득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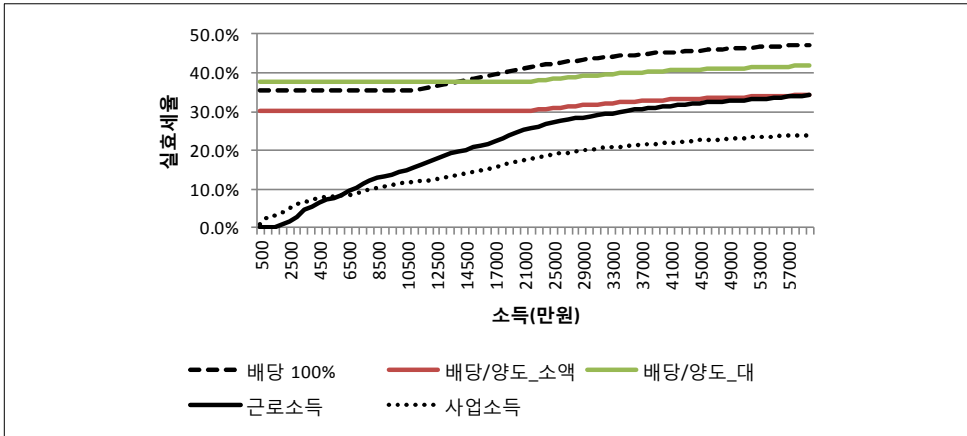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대주주의 경우에는 소액주주보다 높은 실효세율 수준을 보여준다. 그 격차는 약 7.5%p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특이한 점은 낮은 소득구간에서 100% 배당일 때보다 배당 및 양도소득이 각각 50%인 경우에 더 높은 실효세율을 보여준다. 이는 대주주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 20%, 25%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비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이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기업의 대주주이지만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양도소득보다 배당소득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부동산 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매우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1세대 1주택에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에 비과세하는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을 향유하기 위한 기간 동안 세부담이 상당한데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양도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산출하기 위해 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지방세인 재산세도 포함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도출하기 위해 도입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20년이며 동 기간 동안 실질 투자수익률은 연 3%, 물가상승률은 연 1%로 가정한다. 보유기간 중 고려되는 세부담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산세(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등록세와 종합부동산세이다.

17) 2018년 기업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배당성향은 24.8% 수준(서울경제, 「한 배당성향 G7 평균 웃도는데... '스튜어디십코드' 앞세워 쥐어짜기」, 2019. 8. 28).

〈그림 3〉 주식 관련 소득의 배당비중에 따른 실효세율(2019년)



주: 배당(100%)는 배당소득에 대한 전체 세부담이며 배당/양도는 기업소득의 배분이 배당 50%-내부유보 50%로 이루어진 경우를 상정하며 “소액”은 소액주주, “대”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를 의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1인 기준이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과약률 70.7% 적용.

자료: 저자 작성.

주택 양도차익의 경우, 주택처분시 소득이 한꺼번에 발생한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투자결정 단계에서 직면하는 한계세율 도출¹⁸⁾을 통해 세부담 수준을 비교한다. 이러한 한계세율은 분류과세하는 양도소득의 특성상 납세자의 다른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별도로 적용되는 세부담이다. 한계세율 도출을 위해 납세자가 초기가격 3억, 5억, 7억원인 주택을 매입하여 20년 동안 거주하였다가 매각하는 경우를 상정하였다. 또한 1세대 2주택의 경우도 고려하였다. 동시에 주택매입자금의 50%는 융자로 조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계세율을 도출하기 위해 고려된 세금은 주택 취득 시 부담하는 등록세,¹⁹⁾ 그리고 보유기간 동안 재산세(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포함),²⁰⁾ 해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²¹⁾ 등이며 자본조달 비용인 이자 비용도 함께 고려되었다. 구체적으로 보유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은 실질투자수익률(3%)과 물가상승률(1%)의

18) $(1 - (\text{세후수익률} / \text{세전수익률}))$ 로 정의.

19) 상당한 수준의 부담을 야기하여 분석에 포함. 등록세율 0.8% 적용.

20) 재산세는 공평가 비중 60% 적용 후 누진세율 구조(6천만원 이하 0.1%, 1.5억원 이하 0.15%,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 세율 적용), 도시지역분은 세율 0.14%,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로 산출.

21) 공평가 비중 85% 적용 후 누진세율(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12억원 이하 1.0%, 50억원 이하 1.4%,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초과 2.7%) 적용.

합으로 상승한다. 동 기간 동안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현재의 명목금액 기준 제도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주택구입과 비슷한 유형의 장기 자산투자를 비교하기 위하여 연금저축에 대한 한계세율도 도출하였다. 계산의 편의상 1회 연금저축 불입시의 한계세율을 도출한다. 우리나라 연금저축은 EET(Exempt-Exempt-Tax)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초기 연금저축 기여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세부담은 면제하고 최종 연금수급시점에서 과세하고 있다.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기본적으로 종합과세하게 되므로, 한계세율은 연금수급시점의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분석결과 거주주택에 대한 투자 시 양도소득 한계세율은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투자에 대해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1세대 1주택자로서 3억원 가격의 주택매입은 한계세율이 -8.4%이며, 5억원 가격 주택의 한계세율은 -4.9%이다. 이러한 조세지원은 양도가격 9억원 이하에 적용되는 양도소득 비과세 정책의 결과이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7억원 수준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2.2%의 한계세율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20년 보유기간 동안 가격이 9억원 이상으로 상승하여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의 비중이 낮아지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누적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다른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수준보다 낮은 수준²²⁾의 한계세율을 보여주고 있어 동 자산의 취득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5억원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1세대 2주택²³⁾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추가주택 구매의 한계세율은 37.8%로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동소득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이상에 적용되는 한계세율 38.5%와 유사한 수준이다. 주거용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세제를 운용하지만 2주택부터는 이를 억제하는 세제를 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비교대상으로 설정한 자산은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은 정부가 세제혜택을 통해 노후소득 형성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자산이다. 주택과 동일하게 20년 가입을 가정하고 연금수급 시점의 소득수준에 따라 세부담을 계산하면 연금가입에 따른 한계세율을 도출할 수 있다. 연금저축의 한계세율은 수급 당시 면세자의 경우에는 -14.1%로 매우 높은 수준의 조세지원이 이루어진다. 조세지원은 수급자의 소득이

22) 한계세율 계산에서 납세자의 이자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분까지 고려하면 한계세율은 동 수치보다 더 낮은 수준.

23) 다른 주택도 5억원으로 가정.

증가함에 따라 낮아지는데, 연금수급 당시 한계세율 6% 소득자(과세표준 1,200만원)에게는 -3.4%가 적용된다. 이후 빠르게 상승하여 한계세율 24% (과세표준 4,600만-8,800만원) 소득자에게는 33.3%가 적용된다.²⁴⁾ 이러한 세율구조는 상대적으로 노후소득 수준이 낮은 가입자를 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모든 납세자에게 1주택 취득은 다른 자산에 비해 유리한 투자대안임을 보여준다. 즉,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주택에 대한 투자는 수익성 높은 대안으로 자산형성의 초기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수요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 구조는 주택가격이 일정수준까지 상승해도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다만 2주택 이상 다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주택 매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연금저축도 상대적으로 낮은 한계세율이 부과되는 자산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연금저축에 대한 낮은 한계세율은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시기에서 소득이 낮은 은퇴 이후 시점에서의 소득이동을 통해 일생주기 관점의 소비평탄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낮은 공적연금 가입률 등으로 인해 충분한 노후소득을 획득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연금저축을 통한 노후소득 형성 지원은 그 타당성이 높은 정책이다.

연금저축과 주택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노동소득에 비해 낮은 한계세율을 보여주고 있으나 2주택자, 과세표준 8천8백만원 이상자의 연금저축 등에 있어서는 노동소득 한계세율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수준이 노동소득의 세율보

〈표 6〉 주택 양도소득 및 연금저축 투자시 한계세율(2019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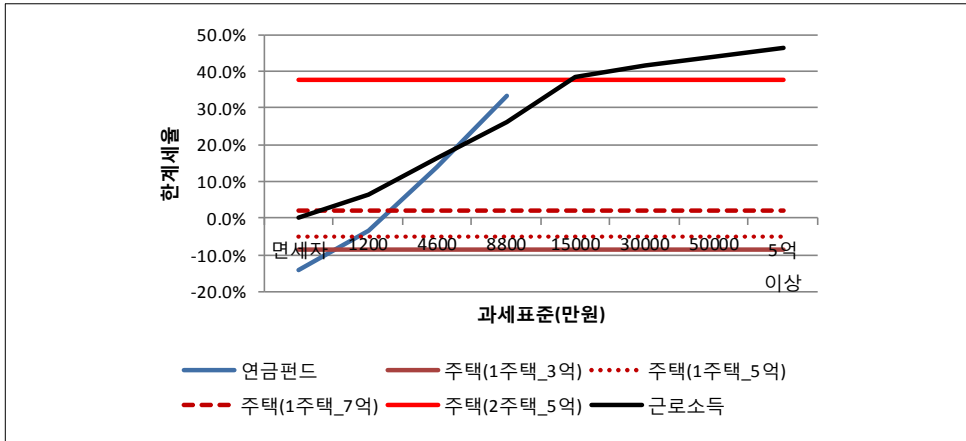
	면세자	한계세율 6%	한계세율 15%	한계세율 24%
연금저축	-14.1	-3.4	14.0	33.3
주택 (1주택_3억)	-8.4	-8.4	-8.4	-8.4
주택 (1주택_5억)	-4.9	-4.9	-4.9	-4.9
주택 (1주택_7억)	2.2	2.2	2.2	2.2
주택 (2주택_5억)	37.8	37.8	37.8	37.8

주: 주택구입액의 50%는 용자로 조달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며 한계세율은 연금급여 수급시점의 소득세 한계세율.

자료: 저자 작성.

24) 연금저축 기여금에 대한 세액공제(15%)를 감안하면 한계세율은 더 낮아지게 됨.

〈그림 4〉 주택 양도소득 및 연금저축 투자시 한계세율(2019년)



주: 가로축은 과세표준 금액이며 주택 구입의 경우 50% 용자를 가정.

자료: 저자 작성.

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이론적 시사점과 배치되지만 주택시장의 특수성에 대한 반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에 대한 과세는 이론적 시사점을 반영하여 노동소득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IV. 노동·자산소득 과세의 재분배 효과

본 장에서는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에 대한 개별적 과세제도를 재정패널 자료에 적용함으로써 가구단위에서 나타나는 과세효과를 분석한다. 노동소득과 개별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차이가 종합적으로 재분배 기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차이와 함께 자산구성 효과도 반영하게 된다.

1. 분석자료 및 세부담 산출

분석을 위한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재정패널 10차연도 (2017년에 조사한 2016년 기준 자료)를 이용한다. 재정패널자료는 2008년 5,014가구와 추가표본 620가구(2009년), 그리고 이 가구들에서 분가된 가구에 대한 추적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2017년 조사에서는 총 4,236가구 자료가 조사되어 원가구 5,632가구 중 75.2%가 포함되어 있다. 분가가구의 경우 소멸가구를 제외한 562가구

중 517가구가 조사되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10차연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2018).

분석단위는 가구단위이다. 소득분배 관련 연구의 의미를 잘 반영하는 것은 생활단위인 가구이기 때문이다. 가구단위의 생활수준을 반영하기 위해서 가구단위 소득은 가구원 규모를 반영하여 조정되었다. 즉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조정된 가구소득규모를 바탕으로 가구 간 소득재분배를 검토한다.

개별 가구의 소득수준은 개인 소득의 합으로 구성한다. 가구주와 가구구성원들의 각종 소득의 합이다. 소득의 범위는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노동소득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²⁵⁾이 해당된다. 자산소득은 예·적금, 채권,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연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부동산자산에서 발생하는 (암묵적) 임대소득 등이 있다. 그 외 보유회원권, 농기계 및 가축, 귀금속 등 기타자산에서 발생하는 (암묵적) 운용소득도 포함한다. 자산소득의 경우, 실제 조사가 이루어진 일부소득, 즉 이자, 배당소득 등을 활용하지 않고 자산가치로부터 도출되는 추정소득을 활용한다. 이는 재정패널의 조사방침상 답변자의 답변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 해당소득으로 기재하기 때문이다. 그 외 거주주택 및 전월세 보증금 등 다양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암묵적소득도 추정하여 이용한다. 자산소득의 추정에 이용된 수익률은 회사채 수익률(3년, AA- 기준)을 이용하였다. 2018년 기준 2.651% 수준이다.²⁶⁾ 동 수익률은 모든 자산에 적용되었다.

자산소득의 가구원별 배분은 추정소득과 조사소득을 함께 활용하였다. 개별 가구원의 자산소득은 실제 조사된 개인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이용하였다. 가구주의 자산소득은 가구 자산규모로부터 추정된 유형별 자산소득에서 가구원의 실제 조사 유형별 자산소득을 차감하여 도출하였다. 이런 자산소득 배분은 가구 내 자산 보유행태를 상당부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 경우 암묵적 소득을 유발하는 거주주택, 전월세 보증금 등은 가구주의 자산소득으로 분류된다.

가구단위 소득구성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개인별 소득유형별로 실제 적용되는 소득세제를 적용하였다.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설정하였다. 비록 미시자료는 2016년 기준 자료이지만 분포에 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현 제

25) 엄밀히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합이지만 노동소득으로 구분한다.

26)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자: 2019. 8. 26).

도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 산출에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가 적용되었다. 세액산출단계에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였다. 표준세액공제의 적용은 선택적 세액공제항목인 각종 특별세액공제 항목의 계산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인적공제의 경우, 소득이 없는 가구원은 가구주의 부양가족이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만을 적용하였다. 사회보험료 부담 역시 소득공제의 항목이나 재산수준을 고려하는 건강보험료로 인해 사업소득자에 대해 정확한 기여금 수준을 도출하기 어려워 제외하였다.²⁷⁾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은 14%의 분리과세 요율을 적용하였다. 그 기초자산은 예적금, 펀드, 채권보유액이다. 주식보유액에서 도출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배당소득과 내부유보로 인한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제도를 적용하였다. 우리나라 상장법인들의 2018년 배당성향이 24.8%인 점을 감안하여²⁸⁾ 수익의 25%를 배당하고 나머지 75%를 양도차익으로 회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2단계로 발생한다. 1차적으로는 법인의 이익에 대해 납부하는 법인세의 형태이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2018년 법인세 중간세율인 22%로 과세되는 것으로 가정한다.²⁹⁾ 두 번째 단계는 개인단계에서 부과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이다. 2단계의 세부담을 감안하기 위해 분리과세 적용자에게 적용되는 배당분 세액(세율 14%)³⁰⁾과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비과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주식보유 시 세부담 = 법인분 + 배당분 + 양도소득분
- 법인분 세액 = 자산수익 × 법인세율(22%)
 - 배당분 세액 = 자산수익 × (1 - 법인세율) × 배당성향(25%) × 세율(14%)
 - 양도소득분 세액 = 자산수익 × (1 - 법인세율) × 내부유보분(75%) × 세율(0%)

기타 금융자산 중 보험, 주택마련저축에서 발생하는 자산소득은 14% 세율로 원천

27) 이에 따라 소득세 실효세율은 실제보다 높게 나타나게 된다.

28) 서울경제신문, 「韓(한) 배당성향 G7평균 웃도는데...」, 2019. 8. 28.
(<https://www.sedaily.com/NewsView/1VN5A0RSJA>), 검색일자: 2019. 9. 23.

29) 4단계 누진과세체계(10%/20%/22%/25%)에서 중간세율 22%로 가정.

30)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대상자가 거의 없어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배당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징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빌려준 돈의 경우 개인간 거래에 가까우므로 비과세 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예외는 연금저축으로 현재 사적연금소득은 1,200만원 이하이면 5% 원천징수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개인의 은퇴 이후 소득 상황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5%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연금저축은 장기간 적립 후 연금소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평균 적립기간을 10년으로 가정하면 실제 적용세율은 원천징수세율 5%의 80% 수준³¹⁾인 4%이므로 동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가구의 자산구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제도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전부이다. 2018년 기준으로 부동산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이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하도록 하고 있다.³²⁾ 부동산 임대소득의 원천은 부동산 자산 중 보유주택과 주택 외 보유 부동산(토지, 건물)으로 설정하였다. 부동산 임대소득이라 함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소득이므로, 본인 거주주택을 포함한 주택 및 부동산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본인 거주주택에는 실제 금전의 지불은 없지만 암묵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향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한다. 다만 암묵적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소득세 부담계산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그 외 부동산 자산인 주택 전월세 보증금, 비주택 전월세 보증금 등도 암묵적 소득을 획득하고 있으며 소득세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종 회원권, 농기계, 가축, 귀금속 등 기타 자산도 서비스 등을 통해 암묵적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그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없다. 즉 동 관련 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 세율은 0%가 된다.

2. 기초통계 및 분석결과

재분배 효과분석을 위해 자료를 구축한 결과 전체 4,790가구의 가구주 소득은 평균 3,76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분위별로는 1분위가 311만원으로 가장 낮으며 10분위는 1억 994만원으로 약 35.4배의 격차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저소득가구는 65세 이상 고령 가구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그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소득 1~3분위 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거의 은퇴연령에 가까우며 소득 6~10

31) 물가상승률 2%를 가정하면 10년 후 5%의 현재가치는 약 4% 수준. 즉 $1/(1.02^{10})=0.82$ 이므로 $5\% \times 0.82 \approx 4\%$.

32) 이때 경비율은 60%를 적용한다. 2019년부터는 2천만원 이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표 7〉 가구주의 소득구성

(단위: 명, 세, 만원)

구분	1분위 ¹⁾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샘플 수	479	479	479	480	478	479
가구주 연령(세)	73	66	58	53	51	48
65세 이상 비중(%)	85.0	66.4	43.4	30.2	22.4	13.2
근로소득	37	201	639	1,196	1,560	2,165
사업소득	26	136	324	422	682	691
환산 이자소득 ²⁾	20	50	52	52	56	61
환산 배당소득 ³⁾	1	2	3	3	4	3
환산 부동산소득 ⁴⁾	109	307	378	412	489	537
환산 기타 금융소득 ⁵⁾	0	3	3	5	6	6
환산 기타 자산소득 ⁶⁾	0	1	2	2	3	6
사적 이전소득 ⁷⁾	74	123	98	95	89	37
공적 이전소득 ⁸⁾	43	69	39	34	54	51
합계	311	893	1,539	2,220	2,944	3,556

구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샘플 수	480	478	479	479	4,790
가구주 연령(세)	48	47	49	48	54
65세 이상 비중(%)	10.0	8.0	6.7	6.1	17.3
근로소득	2,562	3,358	4,450	6,954	2,245
사업소득	989	921	905	1,893	685
환산 이자소득	57	82	115	199	73
환산 배당소득	5	5	11	34	7
환산 부동산소득	629	677	1,070	1,758	622
환산 기타 금융소득	16	15	28	80	16
환산 기타 자산소득	3	8	8	25	6
사적 이전소득	64	50	32	19	69
공적 이전소득	50	36	31	31	44
합계	4,376	5,152	6,651	10,994	3,766

주: 1) 소득 10분위는 가구규모로 조정된 소득, 즉 $\text{가구소득} / \sqrt{\text{가구원수}}$ 을 기준으로 구분.

2) 환산 이자소득은 은행 등 금융기관 예적금, 펀드 가입 금액, 채권 보유 금액에 2.651% (2018년 기준 회사채 수익률(3년, AA-))를 곱하여 구한 기대수익.

3) 환산 배당소득은 주식보유금액에 2.651%를 곱하여 구한 기대수익.

4) 환산 부동산소득은 거주 자가주택 시가총액,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 주택 외 보유 부동산(토지, 건물), 주택 전월세 보증금에 2.651%를 곱하여 구한 기대수익.

5) 환산 기타 금융소득은 연금저축, 저축성 보험, 연금성 보험, 작년 한 해 주택마련저축 또는 주택 마련펀드 불입한 금액, 빌려준 돈, 기타 금융자산에 2.651%를 곱하여 구한 기대수익.

6) 환산 기타 자산소득은 보유 회원권(골프, 콘도 등), 농기계, 가축, 귀금속, 기타자산 등에 2.651%를 곱하여 구한 기대수익.

7) 타 가구 이전소득.

8)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자녀양육지원금(보육비, 교육비, 급식비, 다자녀지원금, 기타), 기타 현물지원.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2018)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8〉 가구(가구주, 가구원)의 소득구성

(단위: 명, 세, 만원)

구분	1분위 ¹⁾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샘플 수	479	479	479	480	478	479
가구주 연령(세)	73	66	58	53	51	48
65세 이상 비중(%)	85.0	66.4	43.4	30.2	22.4	13.2
근로소득	43	282	861	1,568	2,072	2,880
사업소득	30	153	376	483	797	826
환산 이자소득 ²⁾	20	51	54	52	58	63
환산 배당소득 ³⁾	1	2	3	3	6	3
환산 부동산소득 ⁴⁾	109	312	403	430	500	544
환산 기타 금융소득 ⁵⁾	0	3	3	5	6	6
환산 기타 자산소득 ⁶⁾	0	1	2	2	3	6
사적 이전소득 ⁷⁾	83	142	119	117	97	46
공적 이전소득 ⁸⁾	44	72	40	37	58	55
합계	331	1,017	1,863	2,696	3,597	4,428

구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샘플 수	480	478	479	479	4,790
가구주 연령(세)	48	47	49	48	54
65세 이상 비중(%)	10.0	8.0	6.7	6.1	17.3
근로소득	3,465	4,574	6,073	9,236	3,015
사업소득	1,214	1,108	1,243	2,798	881
환산 이자소득	58	84	118	213	75
환산 배당소득	5	5	11	36	7
환산 부동산소득	652	693	1,129	2,067	666
환산 기타 금융소득	16	15	28	80	16
환산 기타 자산소득	3	8	8	25	6
사적 이전소득	69	67	38	23	81
공적 이전소득	61	40	34	33	48
합계	5,542	6,593	8,683	14,511	4,795

- 주: 1) 소득 10분위는 가구규모로 조정된 소득, 즉 가구소득/ $\sqrt{\text{가구원수}}$ 을 기준으로 구분.
- 2) 환산 이자소득은 은행 등 금융기관 예적금, 펀드 가입 금액, 채권 보유 금액에 2.651% (2018년 기준 회사채 수익률(3년, AA-))를 곱하여 구한 기대수익.
- 3) 환산 배당소득은 주식보유금액에 2.651%를 곱하여 구한 기대수익.
- 4) 환산 부동산소득은 거주 자가주택 시가총액,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 주택 외 보유 부동산(토지, 건물), 주택 전월세 보증금에 2.651%를 곱하여 구한 기대수익.
- 5) 환산 기타 금융소득은 연금저축, 저축성 보험, 연금성 보험, 작년 한 해 주택마련저축 또는 주택 마련펀드 불입한 금액, 빌려준 돈, 기타 금융자산에 2.651%를 곱하여 구한 기대수익.
- 6) 환산 기타 자산소득은 보유 회원권(골프, 콘도 등), 농기계, 가축, 귀금속, 기타자산 등에 2.651%를 곱하여 구한 기대수익.
- 7) 타 가구 이전소득.
- 8)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자녀양육지원금(보육비, 교육비, 급식비, 다자녀지원금, 기타), 기타 현 물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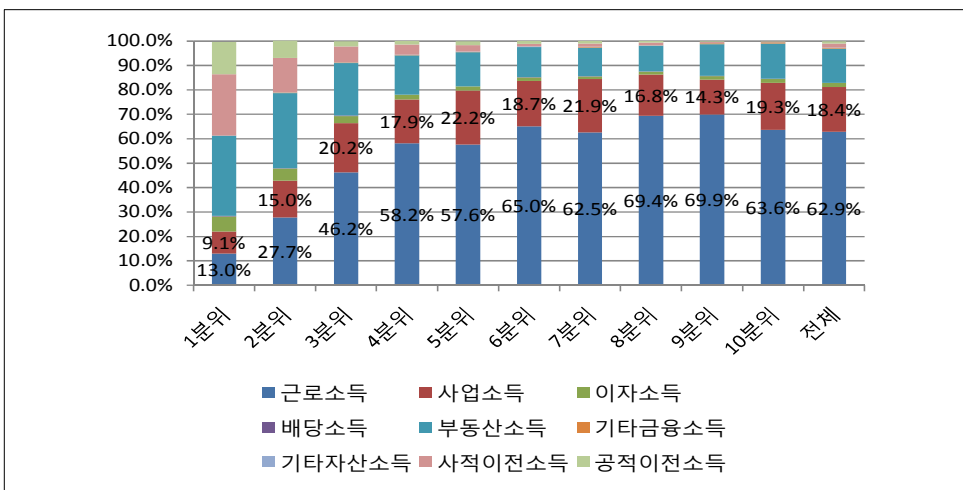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2018)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분위의 가구주 연령은 47~49세로 경제활동이 왕성한 연령대이다. 이는 배우자 등 다른 가구원의 연령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실제 가구주 이외 성인 가구원의 소득까지 포함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1분위 소득은 331만원으로 6.4% 증가하지만 10분위 소득은 1억 4,511만원으로 32.0% 증가하여 소득격차는 43.8배(14,511만원/331만원)로 더욱 높아진다. 이는 고령층 중심의 저소득가구의 존재로 인해 가구원의 경제활동참여를 통해 가구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가구소득의 유형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노동소득인 근로소득 62.9%, 사업소득 18.4%로 두 소득이 전체의 8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노동소득이 가구소득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노동소득의 획득 및 과세가 소득분배에 중요함을 보여준다. 자산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이자 및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기타금융 및 자산소득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자산소득 중에서는 부동산(환산)소득의 비중이 높은 수준이다. 가계의 높은 저축률과 부동산 중심의 자산구조 등에 따른 결과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소득의 비중은 평균 13.9%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비중은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더 높아지는데 1분위 가구의 경우 32.9%에 달한다. 반면 10분위는 14.2%에 불과하다. 저소득층의 부동산자산 편중 현상은 고소득층에 비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그림 5〉 분위별 가구소득의 유형별 구성



주: 소득 10분위는 가구규모로 조정된 소득, 즉 $\text{가구소득} / \sqrt{\text{가구원수}}$ 을 기준으로 구분.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2018)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전소득의 비중은 저소득분위에서 높고 고소득분위에서 낮게 나타나 경제적 직관에 부합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공적 이전소득보다 사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가구 간 이전소득이 여전히 저소득층의 소득구성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적 이전소득은 1분위 소득가구의 소득 중 25.1%를 차지하고 있어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 13.3%보다 높다.

세제의 재분배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노동소득과 자산소득 유형별 소득세 부담을 살펴본다. 소득세 부담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만 주택자산의 경우, 보유세 부담 역시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소득세 부담에 대한 분석은 2가지 측면의 지표를 이용한다. 하나는, 전체 소득에 대한 각 소득세액의 비율이다. 전체 소득세 부담 중 개별 소득세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별 소득원천 간 세율 비교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다. 전체 소득 중 개별 소득원천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기 위해 두 번째로, 개별 소득원천별 실효세율을 살펴본다. 이는 소득원천 간 과세 형평성을 비교하기에 적합하다.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개별 소득원천에 따라 실효세율 격차를 분석한다.

먼저 전체 소득에 대한 개별 소득세액의 비율을 살펴본다. 가구 기준으로 산정한 총소득세 부담(주택 보유세 포함)은 평균 4.74%로 나타났다. 이는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다. 소득분위별로는 비교적 누진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1분위의 총부담 2.75%에서 3분위의 2.25%로 낮아진 후 소득분위 증가에 따라 증가하여 10분위의 총부담은 12.01%에 달한다. 소득 2~4분위의 경우, 1분위에 비해 낮은 총소득세 부담(주택 보유세 포함)을 보여준다. 그 원인은 1분위의 금융소득세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예금 등 금융자산 이자소득의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14%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만약 저소득계층에서 이자소득의 비중이 높아지면 전체 소득세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1분위는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근로 또는 사업 소득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은 0%에 가까운 반면, 금융소득에는 여전히 14%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금융소득 비중이 높아지면 실효세율이 높아지게 된다. 소득 1분위의 소득 중 14% 세율이 적용되는 이자소득 비중은 6.0%로 2분위 5.0%, 3분위 2.9%, 4분위 1.9%에 비해 높다. 이로 인해 전체 소득세 실효세율이 소득 2~4분위에 비해 소폭 높은 수준이다.³³⁾

33) 이러한 결과는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영향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각 가구의 금융상품 중 비과세·감면 상품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구분하기는 어렵다.

〈표 9〉 가구 기준 소득세 효과

(단위: 만원, %)

구분		1분위 ¹⁾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세전) 총소득		331	1,017	1,863	2,696	3,597	4,428
(근로+사업) 소득세		0	3	17	43	94	155
자산	금융자산소득세 ²⁾	3	9	10	9	11	11
	주택자산 보유세 ³⁾	4	12	15	16	19	20
	부동산자산 소득세 ⁴⁾	0	0	0	0	0	1
	기타 자산소득세 ⁵⁾	0	0	0	0	0	0
	총자산소득세	7	20	25	25	30	32
세후 소득		324	995	1,821	2,628	3,472	4,240
실효 세율 ⁶⁾	근로+사업	0.01	0.24	0.83	1.45	2.47	3.37
	금융자산	1.72	0.89	0.57	0.36	0.33	0.27
	주택자산(보유세)	1.02	1.15	0.85	0.61	0.54	0.45
	부동산자산	0.00	0.00	0.00	0.00	0.01	0.03
	자산소득	2.74	2.05	1.42	0.98	0.88	0.75
	근로+사업+자산소득	2.75	2.28	2.25	2.43	3.35	4.12

구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세전) 총소득		5,542	6,593	8,683	14,511	4,795
(근로+사업) 소득세		255	375	621	1,848	323
자산	금융자산소득세	12	16	24	51	15
	주택자산 보유세	23	27	44	73	25
	부동산자산 소득세	2	2	9	80	9
	기타 자산소득세	0	0	0	0	0
	총자산소득세	37	44	77	204	49
세후 소득		5,250	6,174	7,985	12,459	4,423
실효 세율	근로+사업	4.49	5.52	6.90	10.79	3.51
	금융자산	0.22	0.26	0.29	0.35	0.52
	주택자산(보유세)	0.41	0.40	0.52	0.53	0.65
	부동산자산	0.05	0.02	0.12	0.34	0.05
	자산	0.68	0.68	0.92	1.22	1.23
	근로+사업+자산	5.17	6.20	7.82	12.01	4.74

주: 1) 소득 10분위는 가구소득/ $\sqrt{\text{가구원수}}$ 을 기준으로 나눔.

2) 금융자산소득세: 이자(은행 등 금융기관 예적금, 펀드, 채권, 연금저축, 보험, 주택마련저축, 기타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 소득 및 배당소득세.

3) 부동산(주택) 자산 보유세: 거주 자가주택,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에 대한 보유세.

4) 부동산자산 소득세: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 주택 외 보유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한 임대소득세.

5) 보유 회원권(골프, 콘도 등), 농기계 가축, 귀금속, 기타자산은 기계나 권리 등의 이용을 통해 서비스를 향유하므로 세부담 0%.

6) 실효세율은 모두 세전총소득에 대한 실효세율.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2018)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택의 보유에 따라 부담하는 보유세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아니지만 지방의 공공재 편익에 대한 과세와 거주주택의 암묵적 소득에 대한 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바, 분석에 포함하였다. 주택보유세는 소득분위 변화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는다. 오히려 소득분위 증가에 따라 낮아지는 추세도 볼 수 있다. 소득 1분위의 경우 1.02% 수준이나 5분위 이상 소득계층은 0.4-0.5%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분위별 소득 격차에 비해 주택자산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으면 나타날 수 있다. 즉, 고령의 저소득 계층이 과거 저축의 영향으로 소득수준에 비해 주택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보유세는 동 계층의 소득수준에 비해 다른 계층의 비율보다 높아질 수 있다.

노동소득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비율은 누진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소득 1분위의 경우 0.01%로 노동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없다가 소득 증가에 따라 10분위는 10.79%까지 증가한다. 소득구성 중 노동소득의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과 누진적 노동소득세 부담구조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액 비중을 보여주는 소득은 부동산 자산소득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부동산 관련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치밀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으로 2천만원 이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³⁴⁾ 동시에 임대소득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거주주택에 대한 암묵적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고 있다.

각 소득원천별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해 소득별 실효세율을 살펴본다. 가구기준 소득원천별 세부담 수준은 주택자산 보유세가 4.85%로 노동소득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4.79%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 1분위의 주택보유세 부담은 4.45%로 소득 1분위가 부담하는 다른 자산소득 실효세율보다 월등히 높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 주택보유세가 저소득분위 가계에 가장 큰 부담요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택보유세를 통한 분배개선을 추구하기는 어렵다. 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달리 금융소득 및 부동산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적절한 수준의 과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부동산자산 소득세(1)의 부담은 저소득 분위에서는 거의 없으며 고소득분위에서도 낮은 수준이다. 소득 10분위의 부동산자산 소득세(1) 실효세율은 0.81%에 불과하다. 소득분배적 관점에서 부동산자산 소득세의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율 관점보다 과세기반 확충이 중요하다. 부동산 임대소득

34) 2019년부터 과세(14%의 세율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에 대한 과세는 2019년부터 2천만원 이하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당분간 소득 파악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표 10〉 가구 기준 소득유형별 실효세율(가구주+가구원)

(단위: 만원, %)

구분		1분위 ¹⁾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실효 세율 ²⁾	근로+사업 소득	0.03	0.49	1.21	1.84	3.07	4.02
	금융자산소득	15.43	15.42	15.49	15.38	15.41	15.28
	주택자산 보유	4.45	4.58	4.69	4.73	4.78	4.78
	부동산자산소득 1	0.00	0.00	0.00	0.00	0.02	0.04
	부동산자산소득 2	0.00	0.00	0.00	0.00	0.01	0.73
	전체 자산소득	5.63	5.19	5.02	5.35	5.40	5.25
구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실효 세율	근로+사업 소득	5.28	6.34	8.08	12.65	4.79	
	금융자산소득	15.03	15.29	14.44	14.83	15.18	
	주택자산 보유	4.82	4.91	5.09	5.36	4.85	
	부동산자산소득 1	0.07	0.07	0.22	0.81	0.12	
	부동산자산소득 2	0.38	0.25	1.07	19.00	1.96	
	전체 자산소득	5.50	6.12	5.78	6.74	5.59	

주: 1) 소득 10분위는 가구소득/√가구원수를 기준으로 나눔.

2) 실효세율

- 근로+사업=(근로+사업) 소득세/(근로+사업) 소득

금융자산=금융자산소득세/금융자산 환산소득

주택자산 보유세=주택자산 보유세/주택자산 환산소득

부동산자산 1=부동산자산 소득세/부동산 환산소득

부동산자산 2=부동산자산 소득세/(부동산 환산소득-주택 환산소득).

- 전체 자산=자산소득세/자산 환산소득.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 (2018) 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전반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지니계수를 통해 분석한다. 세전 총소득기준 지니계수는 0.4591로 나타났다. 노동(근로+사업) 소득세를 납부하고 난 후의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는 0.4402로 약 4.1%, 소폭의 개선효과를 보인다. 반면 금융자산 소득세의 부과 이후 지니계수는 0.4405로 소득분배를 소폭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분위의 금융소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금융자산 소득세의 역진적 효과는 비과세·감면 상품 보유에 대한 미고려로 확대되었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추정치보다 작을 것으로 추정된다.³⁵⁾

35) 저소득층의 비과세저축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자산 소득세 부과 시 재분배효과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부동산자산 소득세 부과 이후 지니계수는 0.4399로 부동산자산 과세 이전에 비해 개선된 수치를 보인다. 그러나 개선 정도는 0.1% 정도로 미미하다. 부동산자산의 분포와 소득분포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자산 소득세로 인한 재분배효과는 소득 10분위 계층에서 주로 나타난다. 소득 10분위 내 소득분배 상황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부동산자산 소득세를 고려함으로 인해 기존의 0.223에서 0.220으로 개선된다. 그러나 그 외 소득분위에서는 개선효과가 거의 없다. 부동산자산 소득세의 고려는 최상위 소득가구에 세부담을 유효하게 늘리는 수단이다.

〈표 11〉 가구 기준 지니계수

구분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6 분위	7 분위	8 분위	9 분위	10 분위	전체
세전 총소득	0.339	0.189	0.159	0.150	0.141	0.149	0.131	0.147	0.121	0.248	0.4591
세전 총소득 - 노동소득세	0.339	0.189	0.157	0.147	0.138	0.147	0.129	0.144	0.116	0.223	0.4402
세전 총소득 - 노동소득세 - 금융자산소득세	0.340	0.190	0.158	0.148	0.139	0.148	0.129	0.144	0.117	0.223	0.4405
세전 총소득 - 노동소득세 - 금융자산소득세 - 주택보유세 - 부동산소득세	0.340	0.190	0.159	0.149	0.139	0.148	0.130	0.144	0.117	0.220	0.4399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2018)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V. 결론 및 정책시사점

본 논문은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과세 형평성 분석을 위해 먼저 선행 이론 연구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이러한 이론 연구들의 결과가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노동 및 자산 유형별 소득세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동 및 개별 자산에 대한 소득과세 제도가 최종 소비단위인 가계단계에서 나타내는 재분배효과를 분석한다. 즉 노동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이론적 관점과 개별 투자대안의 관점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계단위에서 분석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최적과세 관점의 선행연구 결과는 자산소득에 대한 양(+)의 조세부과를 지지하고 있지만 그 수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자산소득 과세수준 결정에 있어 기존의 자본소득 과세에 대한 효율성, 형평성 관점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안정성도 중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이 될 필요가 있다. 외국과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자본의 해외유출입 등 거시경제의 취약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사한 경험을 한 북유럽국가의 이원적 소득과세 사례가 고려될 수 있다. 자본소득에 대해 과세하되, 노동소득의 낮은 세율수준으로 과세하여 거시경제적 안정성도 추구하는 사례이다.

또한 각종 자산 관련 소득에 대해 세율 격차를 줄여나가며 단일세율에 근접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기준으로 자산소득세율을 접근시키는 것이 자산구조의 왜곡을 줄이는데 중요하다. 자산소득을 통한 지나친 소득격차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범위에서 누진적 과세구조를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 기존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부동산세는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는 제도로 그 적용범위의 설정을 통해 기존 이론과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의 세제 운용사례는 자본의 국제간 이동과 연관성 높은 소득유형별 최고세율을 살펴본다. 고소득층이 자본의 국제간 이동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제적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가들의 노동소득과 자산유형별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최고세율의 관점에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비교대상 국가들 중 중간 정도 위치에 있다. 노동소득 과세와 비교한 자산의 소득과세 수준은 노동소득 과세 수준과 유사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최고 세율이 상당히 높은 그룹에 속한다. 즉 51.0% 수준에 달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세계적으로도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위스 등 다음으로 높다. 자산소득에 대한 낮은 세율 역시 높은 수준이다. 고소득자가 직면하는 투자옵션 중 낮은 자산소득 세율은 40.9% (주식양도소득)로서 미국의 47.3% (예금 이자소득) 다음으로 높다.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소득과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의 자산소득 과세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 멕시코, 미국 등에 그친다. 이와 달리 스웨덴, 그리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은 노동소득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자산소득에 과세하고 있다. 자본의 이동성을 감안한 효율성 관점을 반영한 국가들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소득과 자산소득 유형에 따른 소득수준별 실효세율 수준을 비교한 결과, 자산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은 노동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과세되고 있다. 가장 높은 실효세율을 보이는 자산소득은 주식배당소득이다. 주식 배당소

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높은 것은 주주단계에서 비교적 낮은 세율(2천만원 이하일 경우 14% 분리과세) 또는 노동소득과 동일한 한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인의 이익처분이 모두 배당으로 나타나지 않아 주주가 양도소득을 얻게 되면, 배당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종합적 실효세율은 배당소득보다 낮아질 수 있다. 특히 소액주주에게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어 배당성향이 낮아질수록 실효세율이 더 낮아지게 된다. 다른 자산소득인 이자소득 역시 노동소득보다 높은 세부담을 보이고 있다. 예외는 연금소득으로 수급시점에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한계세율 15%)의 낮은 소득일 경우에는 노동소득보다 낮은 한계세율을 보이나, 그 이상의 소득일 경우에는 노동소득보다 높은 한계세율을 보이고 있다. 은퇴 이후 소득수준이 근로시기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갖는 상대적으로 높은 한계세율의 문제점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산투자자에 대한 한계세율 분석결과는 장기투자자산인 주택(부동산)과 연금저축에 대해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기간 저축을 통해 형성되는 자산소득에 대해서 우대하고 있지만 정책 목적에 따라 조세지원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먼저 연금저축은 노후소득 형성을 위해 명시적으로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 납입단계와 운용단계 세부담을 줄여주고 연금소득 획득 시 소득세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에 대한 세부담은 소득세 한계세율 15%(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소득자까지 음(-)의 한계세율, 즉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자발적 장기저축 유인이 약한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형성의 기제로서 작동할 수 있다. 저소득층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생주기 동안 소득이동을 촉진하여 소비평탄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후생증가에 기여하는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주택의 경우에도 조세지원이 이루어지는데 1세대 1주택의 경우 조세지원 내지 낮은 수준의 한계세율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짧은 보유기간의 반복적 거래를 통해 1세대 1주택에 주어지는 조세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점은 다른 자산에 비해 매우 유리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재정패널을 이용한 노동 및 자산소득세의 영향 분석결과, 가계단위에서 부담하는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은 4.74%(주택보유세 0.65% 포함)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 부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노동소득(근로 및 사업 소득) 세로 총소득의 3.51%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81.3%)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매우 제한적

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매우 낮아 총소득의 0.05%에 불과하며 주택보유세가 오히려 총소득의 0.65% 수준을 차지하여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세의 재분배효과는 전통적인 누진과세체계를 취하고 있는 노동소득의 분배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금융소득세는 소득분배에 거의 중립적이거나 소폭 역진적이며 부동산자산 소득세는 누진적이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자산과세에서 자산간 과세 중립성의 유지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을 지는 배당소득 과세와 낮은 부담을 지는 부동산관련 소득에 대해 과세목적에의 부합성, 그 파급효과 등을 바탕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도 본 연구의 한계 역시 존재한다. 자산소득에 대한 양(+)의 과세수준을 지지하는 연구는 많지만 과세수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원적소득과 세와 같이 노동소득 대비 낮은 세율수준의 과세라는 견해가 다수이지만, 그 수준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장기형성소득인 부동산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의 경우, 세제 효율성 제고라는 목적보다 주거안정성 확보라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하에서 추가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1. 기획재정부, “2017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2,” 보도자료, 2017. 8. 2.
2. _____, “2017년도 세법개정안(2개)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2017. 12. 5.
3. 서울경제신문, “韓(한) 배당성향 G7 평균 웃도는데… ‘스튜어트십코드’ 앞세워 쥐어짜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1VN5A0RSJA>, 2019. 8. 28, (검색일자: 2019. 9. 23).
4. 안종석, 『소득세 수입 변동요인 분석 및 정책시사점』, 최종보고회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10.
5. 안종석·전병목, 『자본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연구-DIT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7. 12.
6. 이철인, “재정학 연구동향과 연구과제,” 『재정학연구』, 제7권 제3호, 2014, pp. 55-94.
7. 전병목·안종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 형평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5. 12.
8.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물가·가계, 가계, 가계금융복지조사(소득분배지표),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검색일자: 2019. 10. 21).
9.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검색일자: 2019. 8. 26).
10. _____, “2018년 기업경영분석(속보) 통계편,” 보도자료, 2019. 6. 4.
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 원자료, 2018.
12. _____, 『10차연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2018.

13. Acemoglu, D., V. Carvalho, A. Ozdaglar, and A. Tahbaz-Salehi, "The Network Origins of Aggregate Fluctuations," *Econometrica*, Vol. 80, No. 5, 2012, pp.1977-2016.
14. Atkinson, A. B., and J. E. Stiglitz, "The Design of Tax Structure: Direct Versus Indirect Taxa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6, No. 1-2, 1976, pp.55-75.
15. Auerbach, A. J., "The Theory of Excess Burden and Optimal Taxation," *Handbook of Public Economics*, Vol. 1, Elsevier, 1985, pp.61-127.
16. _____, "Retrospective Capital Gains Tax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1, No. 1, 1991, pp.167-178.
17. Aiyagari, S., "Optimal Capital Income Taxation with Incomplete Markets, Borrowing Constraints, and Constant Discounting,"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3, No. 6, 1995, pp.1158-1175.
18. Boadway, R., "The Dual Income Tax System, An Overview," *CESifo Dice Report*, Vol. 2, No. 3, 2004, pp.3-8.
19. Bucovetsky, S., and J. Wilson, "Tax Competition with Two Instrument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Vol. 21, 1991, pp.333-350.
20. Chamley, C., "Optimal Taxation of Capital Income in General Equilibrium with Infinite Lives," *Econometrica*, Vol. 54, No. 3, 1986, pp.607-622.
21. Chari, V., L. Christiano, and P. Kehoe, "Optimal Fiscal Policy in a Business Cycle Mode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2, No. 4, 1994, pp.617-652.
22. Christiansen, V., "Norwegian Income Tax Reforms," *CESifo Dice Report*, Vol. 2, No. 3, 2004, pp.9-14.
23. Conesa, J. C., S. Kitao, and D. Krueger, "Taxing Capital? Not a Bad Idea After All!,"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9, No. 1, 2009, pp25-48.
24. Correia, I. H., "Should Capital Income Be Taxed in the Steady Stat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60, 1996, pp.147-151.
25. Corlett, W. J., and D. C. Hague, "Complementarity and the Excess Burden of Taxation,"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21, No. 1, 1953, pp.21-30.
26. Domar, E. D., and R. A. Musgrave, "Proportional Income Taxation and Risk-taking,"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58, No. 3, 1944, pp.388-422.
27. Eggert, W., and B. Genser, "Dual Income Taxation in EU Member Countries," *CESifo DICE Report*, 1/2005.
28. Erosa, A., and M. Gervais, "Optimal Taxation in Life-cycle Economies," *Journal of Economic Theory*, Vol. 105, No. 2, 2002, pp.338-369.
29. Golosov, M., N. Kocherlakota, and A. Tsyvinski, "Optimal Indirect and Capital Taxation,"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70, No. 3, 2003, pp.569-587.
30. Golosov, M., and A. Tsyvinski, "Optimal Taxation with Endogenous Insurance Market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22, No. 2, 2007, pp.487-534.
31. Graham, J., and C. Smith, "Tax Incentives to Hedge," *Journal of Finance*, Vol. 54, No. 6, 1999, pp.2241-2262.
32. Harding, M., and M. Marten, "Statutory Tax Rates on Dividends, Interest, and Capital Gains: The Debt Equity Bias at the Personal Level," *OECD Taxation Working Papers*, No.

34. OECD Publishing, Paris, 2018.
33. Jeong, M. H., and C. I. Lee, "Durable Goods and Optimal Fiscal Policy," unpublished working paper, 2019.
34. Jones, L. E., R. E. Manuelli, and P. E. Rossi, "On the Optimal Taxation of Capital Income," *Journal of Economic Theory*, Vol. 73, No. 1, 1997, pp.93-117.
35. Judd, Kenneth L., "Optimal Taxation and Spending in General Competitive Growth Model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71, No. 1, 1999, pp.1-26.
36. Keuschnigg, C., and M. Dietz, "A Swiss Dual Income Tax. For More Neutrality in Company Taxation," University of St. Gallen, 2004.
37. Kopczuk, W., "Taxation of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Wealth," *In Handbook of Public Economics*, Vol. 5, 2013, pp.329-390.
38. Nielsen, S. B., and P. B. Sørensen, "On the Optimality of the Nordic System of Dual Income Taxa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63, 1997, pp.311-329.
39. Piketty, T., Saez, E., "A Theory of Optimal Inheritance Taxation," *Econometrica*, Vol. 81, No. 5, 2013, pp.1851-1886.
40. Ramsey, F. P.,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Taxation," *The Economic Journal*, Vol. 37, No. 145, 1927, pp.47-61.
41. Sørensen, P. B., "From the Global Income Tax to the Dual Income Tax: Recent Reforms in the Nordic Countries,"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Vol. 1, 1994, pp.57-79.
42. Stiglitz, J. E., "Self-selection and Pareto Efficient Taxa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7, No. 2, 1982, pp.213-240.
43. Stiglitz, Joseph E., "The Effects of Income, Wealth and Capital Gains Taxation on Risk-Taking,"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83, 1969, pp.203-283.
44. Stiglitz, J. E., "Some Aspects of the Taxation of Capital Gain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21, 1983, pp.257-294.
45. Vickrey, William, "Averaging Income for Income Tax Purpos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47, 1939, pp.379-397.

Equity in the Taxation of Labor and Asset Incomes

Byung Mok Jeon* · Chul-in Lee**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quity in tax burden between labor income and asset income from savings and various forms of asset. The optimal taxation theory supports the validity of capital income taxation.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macroeconomic stability and the theory supports a single tax rate approach to asset incomes. The estimated tax burden by asset income type and income level is generally higher than labor income in Korea, and the gap among asset income taxes is also found to be significant. We need to moderate high tax burdens and narrow the taxation gap among assets. In particular, the level of taxation on housing investment is very low and needs revision. The redistribution effect at the household level due to taxation of asset income was not significant.

Key Words: asset income tax, labor income tax, equity in taxation

JEL Classification: H24

Received: Dec. 17, 2020. Revised: Dec. 29, 2020. Accepted: Jan. 11, 2021.

* First Author and Corresponding Author, Senior Fellow, Department of Tax Policy Research,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336,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Phone: +82-44-414-2200, e-mail: byungj@kipf.re.kr

** Second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Phone: +82-2-880-6345, e-mail: leeci@snu.ac.kr